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2021. 7. 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인구구조 변화 현황 ····· 1

Ⅱ.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5

Ⅲ.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과 ····· 7

[참고 1] 제1·2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 8

Ⅳ. 제3기 인구정책TF 추진전략 : 4+α 전략 ··· 9

[참고 2] 제3기 인구정책 TF 운영상 특징 ····· 11

Ⅴ. 주요 추진과제 ····· 13

1. 인구절벽 충격 완화 ····· 13

2. 축소사회 대응 ····· 16

3. 지역소멸 선제 대응 ····· 19

4.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 20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21

Ⅵ. 향후 발표 및 추진계획 ····· 22

[참고 3] 인구 TF 1,2,3기 과제 ····· 24

Ⅰ. 인구구조 변화 현황

◇ ❶인구감소, ❷지역소멸, ❸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20년 기점으로 금년부터 본격화될 전망

1 [인구감소] 출산율 감소 → '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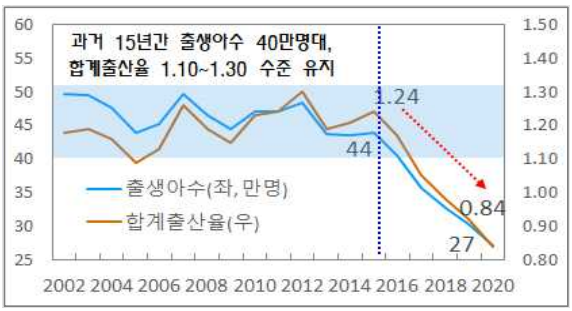
○ '15년 이후 저출산 기조 악화*되며 '20년 합계출산율 0.84명 기록 → 3년 연속 1 하회**,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198개국 中 198위)

*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 **합계출산율** : ('18) 0.98 ('19) 0.92 ('20) 0.84 ☞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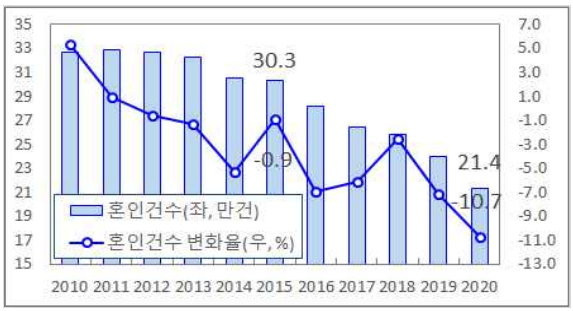
- 출생아수는 '02년 이후 15년간 유지해오던 40만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에 30만명을 하회하며 '20년 출생아수 27.2만명 기록
- 코로나19 등 인한 혼인지연으로 출산율 감소가 더욱 심화될 우려

<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혼인건수 추이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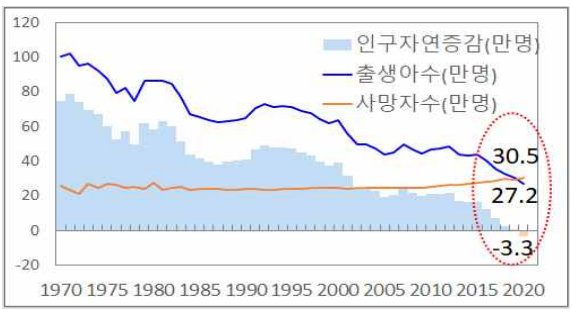
○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기록

* 사망자수(만명) : ('05) 24.6 ('10) 25.5 ('15) 27.6 ('20) 30.5(→ 최초 30만명 초과)

- 향후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여년 만에 1,200만명 이상 줄어들 전망('19 → '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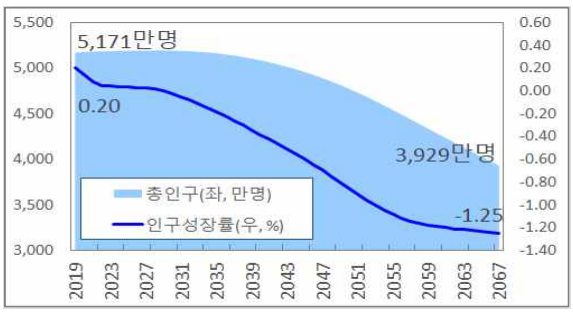
* '19년 → '67년 인구감소율 24.0%, 인구5천만 이상 29개국 중 2위(전세계 235개국 중 17위)

<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절대인구 변화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지역소멸] '20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 소멸위험지역 증가

○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 특히 소멸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며 '20년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에 육박 → 지역소멸 문제 가시화

* 소멸고위험지역 비중(%) : ('13) 0.9 ('14) 1.3 ('15) 1.8 ('16) 2.2 ('17) 3.1 ('18) 4.8 ('19) 7.0 ('20) 10.1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3 [초고령사회 임박] '20년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편입 → 고령화 가속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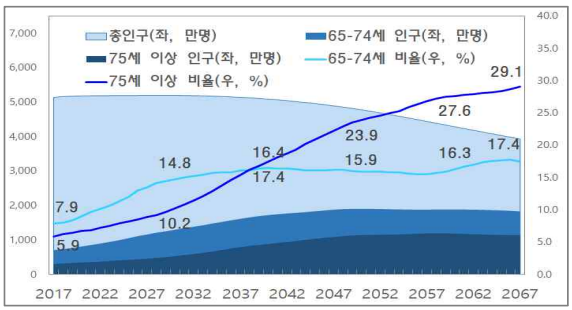
▪ '30년 이후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며 고령층 內 고령화도 심화, 중위연령*은 '65년 62.2세까지 상승

* 중위연령(세) : ('60) 18.9 ('80) 21.4 ('00) 31.8 ('20) 43.7 ('40) 54.4 ('65) 62.2

▪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19→'67년 +81.9)하여, 2위 국가와 30% 이상 차이나는 1위 국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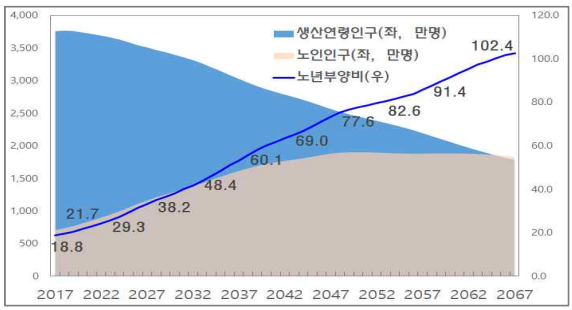
*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67년 기준) :
(韓) 102.4(1위) (대만) 77.5(2위) (日) 75.6(3위) (알바니아) 71.8(4위) (세계평균) 22.1

< 고령층 內 연령구성 변화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노년부양비 추이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과거와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차이 >

❶ (**가속화 국면 진입**) 변곡점 지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 3대 인구리스크 관련 주요 지표 변화 전망 >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인구자연감소 (만명)	-3.3	-6.4	-25.4	-46.9	-55.0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 (만명)	14	103	144	164	178
고령층 비중 (%)	15.7	25.0	33.9	39.8	43.9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❷ (**예상보다 빠른 변화**) 실제 변화가 전망보다 빠르게 진행중

- 급격한 저출산 기조 반영 위해 특별추계('19)를 실시해 인구전망을 수정했으나, 실제 변화는 이보다도 빠르게 전개

< 합계출산율 전망-실적치 차이 >

	'18년	'19년	'20년
실적 (A)	0.98	0.92	0.84
전망 (B)	0.98	0.94	0.90
차이 (A-B)	**0**	**-0.02**	**-0.06**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 장래인구추계

< 출생아수 전망-실적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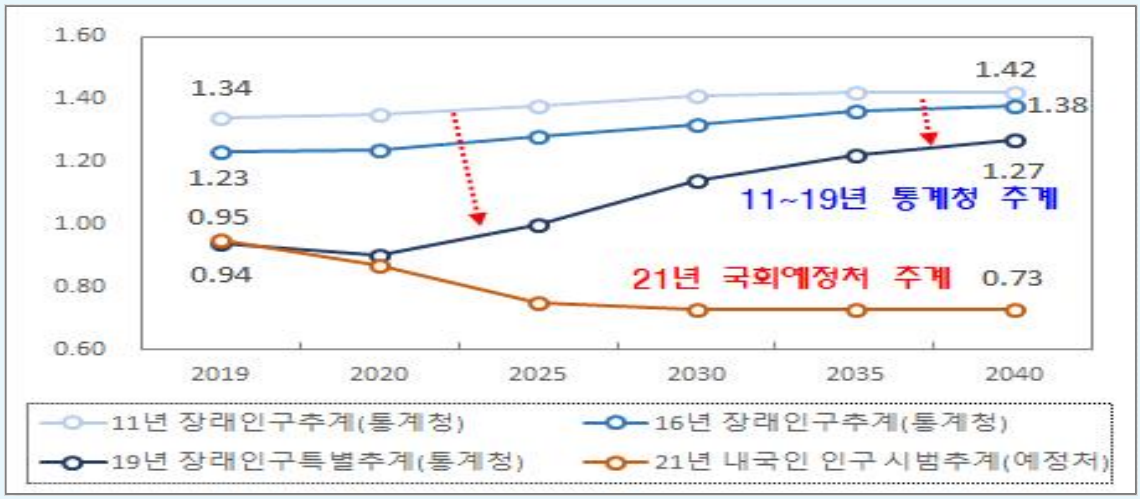
	'18년	'19년	'20년
실적 (A)	32.7만	30.3만	27.2만
전망 (B)	32.5만	30.9만	29.2만
차이 (A-B)	**0.2만**	**-0.6만**	**-2.0만**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 장래인구추계

❸ (**반등 가능성 하락**) 향후 출산율 회복 전망한 기존 견해와 달리 저출산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합계출산율 회복을 전망한 기존 분석(통계청, '19년)과 달리 '20년 0.87명 → '40년 0.73명까지 지속 하락 전망(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1년)

< 합계출산율 전망 변화 >



* 자료 :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추계

참고 1 주요 인구지표 국제비교

□ **(저출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이미 전세계 최하위

< 주요국 합계출산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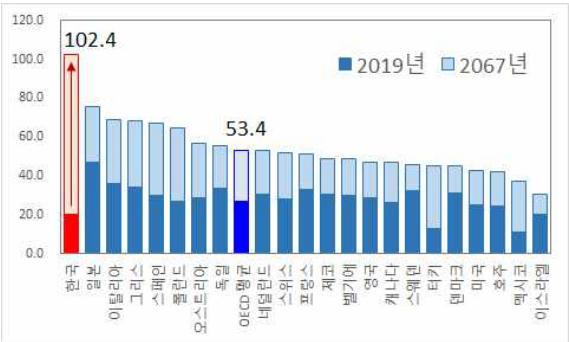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 관련 인구지표 >

- **'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3년 연속 1 하회**
- **'21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전세계 198개국 중 **198위**로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 (UN)
- 합계출산율은 **'40년 0.73명**까지 **지속 하락** 전망 (국회예정처)

□ **(고령화)** 고령층 비중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 → 향후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아질 전망

< 주요국 노년부양비 비교 >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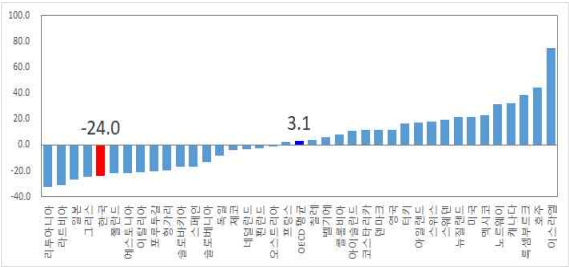
< 관련 인구지표 >

-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 '67년 201개국 중 독보적 1위 전망**
  * ('19) 20.5 (55위) → ('67) 102.4 (1위)
- **중위연령**도 **'65년 62.2세**까지 빠르게 증가, **세계평균과의 격차 더욱 확대**

	한국(A)	세계평균(B)	차이(A-B)
2020년	43.7	30.9	12.8
2065년	62.2	38.2	24.0

□ **(인구감소)**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으며, 극심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전망

< OECD 회원국 인구변화율('19→'67) 비교 >



* 자료 : 통계청

< 관련 인구지표 >

- '19 → '67년 **인구감소율 24.0%, 인구 5천만 이상 29개국 중 2위, OECD 38개국 중 5위**
- '19 → '67년 **인구 1,241.5만명 감소, 전세계 235개국 중 6위, OECD 38개국 중 3위**

Ⅱ.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❶ 변화의 영향은 아직 일부 영역에 한정되고 영향력도 제한적
❷ 하지만 앞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미치게 되고, 거대한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을 거칠 우려

1 [노동공급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67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 → 고령인구(65세 이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노동공급 감소 우려

* 생산연령인구(만명) : ('21) 3,713.3 → ('67) 1,784.2 (↔ 65세 이상 인구 1827.1만명)

▪ 특히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공급 감소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 연령별 인구감소율('21→'67년, %) : (15-24세) △53.6 (25-49세) △56.5 (50-64세) △44.3

<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 전망 >

* 자료 : 고용부 '18-'28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활용

< 잠재성장률 전망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0)

2 [부문별 축소] 축소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 · 비효율 발생

○ 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라 급격한 조정 거칠 우려

▪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등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고,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에 대한 대응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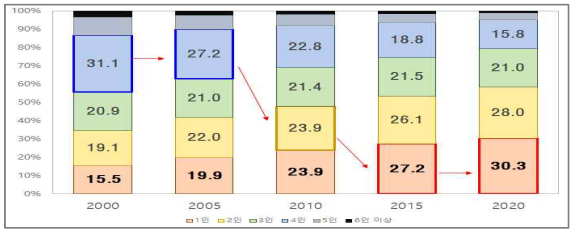
○ 가족 구성은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도 빠르게 바뀌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경향

* 비혼동거 동의율(%) : ('08) 42.3 → ('12) 45.9 → ('16) 48.0 → ('20) 59.7

< 대학 학령인구·정원 변화추이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교육기본통계 활용

< 가구원수별 비중 변화 >



*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3 [지역불균형] 비수도권 경쟁력 상실, 수도권 과밀혼잡 초래

○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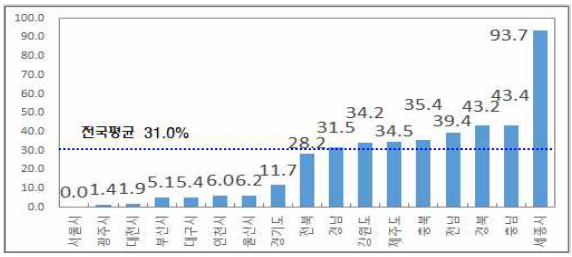
- 지역 내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 악화 초래

○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 증가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 >

* 자료 :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 응급의료시설 10km 밖 거주 취약인구 비율 >



* 자료 :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4 [지속가능성 저해] 고령화 인한 부양부담 · 건강권 보장요구 급증

○ 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 초래

- 4대 공적연금* '40년 적자 전환, 건강보험 '24년 적립금 소진** 등 재정건전성 악화, 세대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전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전망(조원) : ('22) 10.5 ('24) 12.3 ('26) 14.3 ('28)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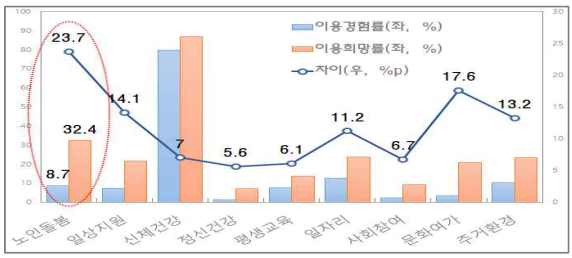
○ 고령인구 증가에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도 확대*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기대수명-건강수명 차이(세) : ('00) 7.9 ('05) 8.3 ('10) 8.8 ('15) 9.3 ('16) 9.4

<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전망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노인 사회서비스 경험·희망비율 >



* 자료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 및 조정비용 초래하기 前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수적

Ⅲ.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과

◇ 그간 1·2기 인구정책 TF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해결책 마련 노력**

□ [경과]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위한 인구정책 TF 구성 · 운영

○ **'19.3월 장래인구추계** 결과 이전 추계보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는 등 가까운 미래에 **저출산 추세 반전**이 **어렵다는 점 확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①**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②**적응력 강화 대책도 투트랙**으로 **추진**

☞ '19년~'20년 두 차례 **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운영

- **(1기 TF)** '19.4월 출범 → '19.9~11월, 4개 전략 · 20개 과제 순차 발표
- **(2기 TF)** '20.1월 출범 → '20.8월, 4개 전략 · 11개 과제 발표

□ [한계]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및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 필요

○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경제·사회 전 분야 영향 확대**로 **새로운 정책수요 발생**

○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❶**1·2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 ❷**구체화가 필요한 과제**가 여전히 존재

- **(1·2기 미포함)** 다양한 고용형태 대응, 대학경쟁력 강화, 가구형태 다양화 대응, 포괄적 지역소멸 대응 방향,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 **(구체화 필요)** 고령자 고용 활성화, 외국인력 부족 대응, 평생학습 지원 등

○ 향후 큰 충격이 예상되어도 사회적 이견, 근시안적 접근 등으로 **반드시 다뤄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 부진**

☞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되는 現 시점에 맞는 **신규 정책수요 발굴·대응, 구조적 문제 논의, 계속과제 관리** 등 필요

-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도 대폭 강화**하고, **인구정책 인프라**도 **강화**한 3기 인구정책 TF 운영

참고 1 제1·2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1 · 2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도전 요인	인구 감소	구조 변화
1기 인구 정책 TF ('19년)	1 생산연령인구 확충 ❶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❷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정책 통합	3 복지지출 증가 관리 ❶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❷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❸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2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❶ (교육)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❷ (국방)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 군인력 획득체계 개선 ❸ (공공서비스)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 ❹ (지방)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	4 고령인구 증가 대응 ❶ (산업)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생산·제조 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❷ (주거) 주택정책 방향 전환,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❸ (금융)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
	①1기과제 구체화 + ②신규과제 추가	
2기 인구 정책 TF ('20년)	1 경제활동 참여 확대 ❶ (여성) 경력단절예방 · 취업지원 등 ❷ (청년) 취업지원 · 사회활동참여 촉진 ❸ (고령자) 고령자 고용 활성화 여건조성, 활성화 위한 논의 개시 ❹ (외국인) 우수인재 · 유학생 · 필요인력별 도입방안 마련, 사회통합 · 정착지원	3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❶ 빈집 실태파악, 지자체 및 소유주의 빈집 정비 · 활용 유도방안 마련 ❷ 생산·유통방식 고도화를 통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 청년 창업지원 확대 ❸ 고령친화적 교통인프라 · 서비스 구축, 고령자 특성 감안한 안전한 교통정책 수립
	2 노동생산성 제고 ❶ 평생교육-직업훈련 통합 거버넌스 구축 ❷ 대학·전문대·훈련기관 등 공급자 체질 개선, 교육·훈련 품질 제고 ❸ 수요자 중심 제도 개편, 능력개발기회 확대	4 고령화 대응 산업 · 제도 설계 ❶ 고령친화 新 산업 육성전략 마련 * (주거)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식품) 고령 친화 식품산업 개척, (여가) 실버 여가산업 창출 등 ❷ 고령자 금융 접근성·역량 강화 등 ❸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착수
저출산 고령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수립 * 초저출산 현상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재원집중 투입	

Ⅳ. 제3기 인구정책TF 추진전략: 4+α 전략

◇ 「4+α 추진전략」을 통해 3대 인구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대응·관리하여 우리 사회 적응력 제고

현황	영향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인구 감소	노동공급 감소	[❶ 인구절벽 충격 완화] ☞ 생산인구의 양적보완 + 질적개선	
		양적보완	여성	▸ 학부모 희망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검토
			외국인력	▸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고령층	▸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
			다양한 고용형태	▸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플랫폼 4법 추진 및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질적개선	평생학습	▸ 원스톱 서비스위한 플랫폼간 연계강화 ▸ 대학의 성인학습자 중심 개편 지원(규제샌드박스 등)
	부문별 축소	[❷ 축소사회 대응] ☞ 분야별 다운사이징 적응 위한 제도 · 산업 정비	
		대학	▸ 정원 유연화 등 규제완화 ▸ 한계대학에 대한 폐교·청산 지원
		산업	▸ 산업현장 필요인력 확보 및 숙련전수
		가족	▸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 확대 ▸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지역 소멸	지역 불균형	[❸ 지역소멸 선제 대응] ☞ 거점도시 육성 + 과소지역 자립역량 강화	
		광역거점	▸ 거점도시 집중 육성, 초광역권 계획 수립 ▸ 행정통합 논의지원 등 지방행정체제 검토
		소멸지역	▸ 지역주도형 지역특화 패키지 대책 지원 ▸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단위 협력 활성화
초고령 사회 임박	지속 가능성 저해	[❹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 · 돌봄 수요대응	
		사회보험	▸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의료·돌봄	▸ 협진 활성화, 재택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 ▸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

[❺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인구통계 관리 · 분석, 연구기능 강화

1 **(전략 1: 인구절벽 충격 완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을 위해 **여성·고령자·외국인** 등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및 평생학습 지원 등 **생산성 제고**

- **(여성)** 학부모 희망 따른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개선
- **(외국인)** 외국인 활용 관리체계 구축, 지역특화형 비자 마련
- **(고령자)**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 재취업지원 의무화 제도 안착 지원
- **(다양한 고용형태)** 플랫폼 4법 추진 등 법·제도 개편
- **(평생학습)** 평생교육·직업훈련 서비스 및 플랫폼간 상호 연계, 법제도 정비

2 **(전략2: 축소사회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 및 1인 가구, 법률혼 외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편**

- **(대학)** 폐교대학 청산제도 마련, 정원 유연화 검토, 지역-대학 협업 강화
- **(산업현장 고령화)**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숙련인력 노하우 DB화
- **(가족다양화)**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정의 확대,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3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역소멸, 지역불균형에 대응하여 **거점도시 집중 육성**과 **축소지역 압축도시화**를 **병행 추진**

- **(거점도시)**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 추진, 지방행정체제 검토
- **(압축도시화)**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지역특화지원 등 패키지 사업 마련

4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고령층 의료·돌봄 강화 등 **고령층 건강권 보장**

-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 **(고령층 건강권)** 고령층 중심 비대면 의료 발전적 방안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추진

5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연구단 구성, 통계 인프라 개선 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연구단)** 경인사연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 인구정책연구단 구성·운영
- **(통계 인프라)**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 및 추계주기 단축 등 통계인프라 개선

참고 2 제3기 인구정책 TF 운영상 특징

◇ **(추진경과)** '21.1월 비상경제중대본 통해 3기 TF 추진계획 발표

○ '21.2월 Kick-off 회의 통해 3기 TF를 본격 가동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방안' 논의중

1 [신규과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핵심과제 적극 발굴

❶ **(논의범위)**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全 영역에 영향 → 경제분야 논의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사회분야 정책논의 대폭 강화

- 사회분야 정책과제 선정 및 작업반 구성하는 한편, 처음으로 사회분야 간사*(교육부 차관보)를 지정해 관련 대책 마련 주도

* 여성고용반·인적자원반·가족정책반 담당 → 해당 과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해 발표

❷ **(정책인프라)** 인구리스크 선제대응이 중요한 시점 → 정부 정책역량 강화 위해 처음으로 연구지원반을 구성·운영해 논의 지원

- 현황분석 및 정책대응 관련 전문성 제공 위해 인구정책연구단*(경인사연·KDI)을 구성해 인구TF 논의지원 및 별도 연구결과** 발표

* 6개 팀(❶총괄팀, ❷인구절벽 충격 완화팀, ❸축소사회 대응팀, ❹지역소멸 선제 대응팀, ❺사회지속가능성 제고팀, ❻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팀) 구성해 인구TF 각 **작업반 논의 지원**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고용, 산업구조 영향 분석 및 정책방향

- 통계청 중심으로 인구정책 통계 인프라를 개선*하고, 해외사례 분석, 국내 인구정책 관련 연구자료 정보제공 등 추진

*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 및 추계주기 단축, 정책수요 따른 통계 세분화 등

❸ **(구조적 이슈)** 향후 큰 충격 예상돼도 당장 문제없으면 논의 부진한 경우 多 → 구조적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대상에 포함

- 사회적 이견 등으로 논의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에서 화두 제시*

* 예 : 초등 교육시간 확대 검토,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검토, 대학 규제완화 추진 등

2 [기존과제] 1·2기 TF 발표과제 이행점검 통해 실효성 확보

○ 1·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326개 과제(1기 101개, 2기 225개) 전체에 대한 이행점검 통해 旣 발표 대책의 연속성, 실효성 확보

- 이행 부진 과제는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별도 관리

3기 인구TF 구성 · 운영방안

□ (출범) '21.2월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

□ (구성) TF 본회의 + ①총괄반 · ②분야별 작업반(8개) · ③지원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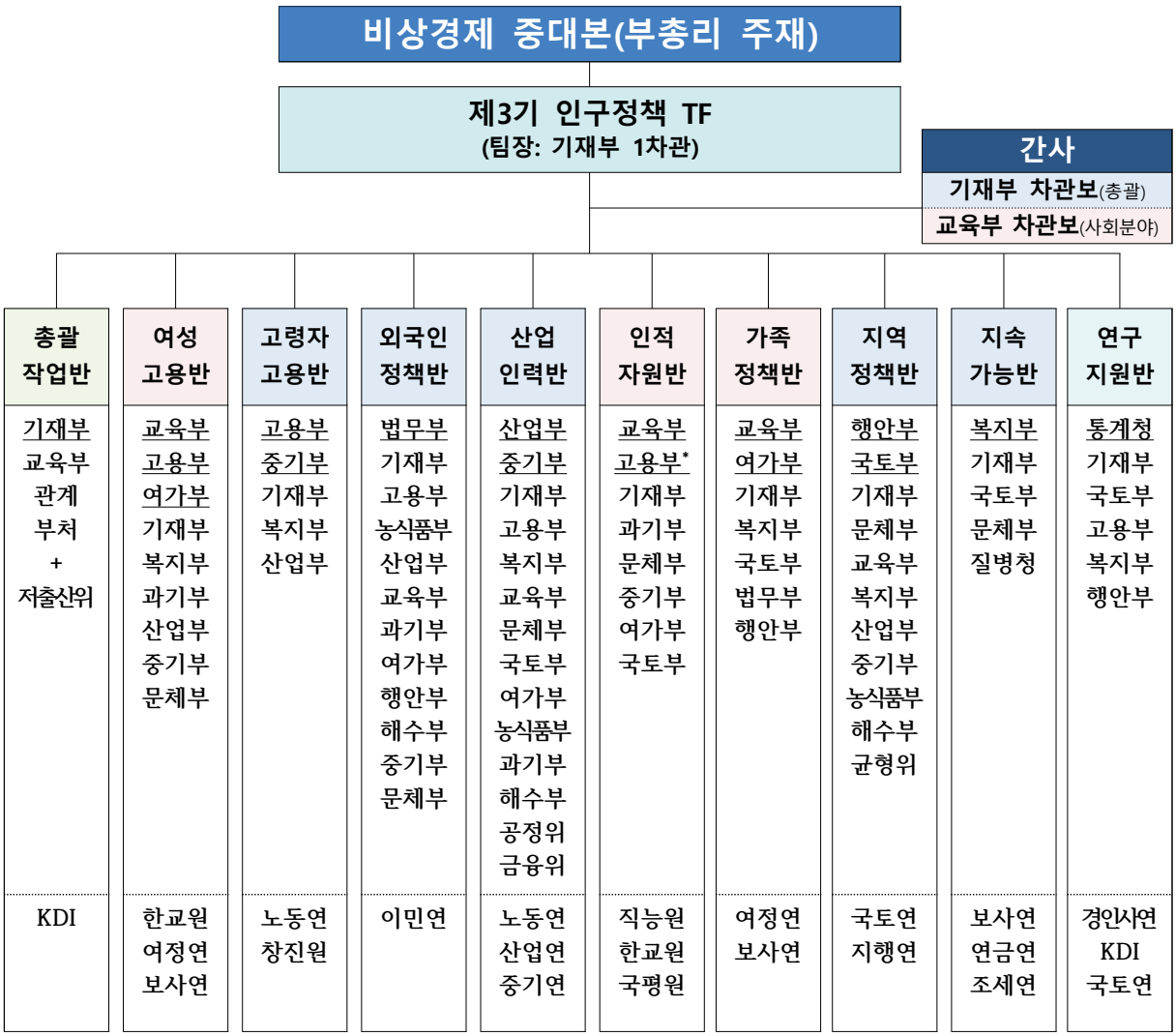
○ 관계부처 + 관련 연구기관 + 민간 전문가(학계) 등 참여

□ (운영) 작업반별 완결된 대책 마련(작업반장 : 주관부처 1급)
→ TF 본회의 승인·발표('21.6월부터 순차 발표)

○ 총괄반은 논의의제 설정 및 방향제시, 부처간 이견 조율 역할

○ 지원반은 인구구조 관련 통계, 연구·분석자료 등 전문성 제공
→ 각 작업반 논의 및 인구정책 수립 지원

< 3기 인구정책 TF 구성 >



※ 밑줄부처는 해당 작업반 주관부처(단, 평생교육·직업훈련 과제는 교육부·고용부 공동주관)

Ⅴ. 주요 추진과제

1. 인구절벽 충격 완화

[생산인구 양적 보완]

1 여성고용 확대

◇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초등돌봄 개선** 등을 통해 **여성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병행 추진

* 여성 경력단절 사유('20):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 **제1·2기 TF 논의과제**

▸ **(2기)** 육아휴직 분할횟수(1회 → 2회)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예술인·특고 출산급여 지급,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

❶ **짧은 정규수업 시간***, **불충분한 돌봄 서비스**에 따른 **초등 돌봄 절벽**에 대응해 **학부모 희망**에 따른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 초등정규수업시수 年 655시간(OECD 평균 804시간)으로 OECD 34개국 중 30위
** 자유놀이 활동,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방과후 체육·예술 활동 등

❷ **돌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개선*

* 부처별 돌봄사업 外 지역사회(지자체, 교육청) 운영 중인 돌봄서비스 추가, 부모가 퇴근시까지 시간대별로 2개 이상 다른 돌봄서비스 신청 허용 등

❸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방안*** **중장기 검토**

*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파악, 정부 인증제 도입 등

❹ 가사근로자법 제정('21.5월)에 따라 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가사근로자 시장 안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❺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성평등 현황 공시제 제도 개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여성진입 강화***

* 신기술 분야 여대 공동 직업훈련 프로그램(D-hub) 마련, 여성 청년·청소년 이공계 진출지원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진로탐색-경력설계-취창업) 마련 등

2 외국인력 활용

◇ 미래인력·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재에 대한 유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ㅇ 지역특화비자 도입 등 **지자체 수요에 부응한 외국인 정책** 강화

◇ **제1·2기 TF 논의과제**

- **(1기)**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성실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인력부족 업종·직종 중심 비전문인력 장기체류(E-7) 비자전환 규모 확대 등
- **(2기)**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운영, 이공계 학부 유학생 비전문인력 취업 허용 등

❶ **유망산업 분야 취업비자 네거티브 방식 도입, 원격근무자(telecommuter) 비자* 신설** 등 **우수 외국인재 유치** 및 **활용 강화**

* 원격근무로 국외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IT·첨단기술 등 인재의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근무지 제공, 동종업계 협업·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국내정착 유도

❷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력**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자격 변경* 확대**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외국인력이 연간소득, 기술숙련도 등에서 일정 기준 충족시 장기체류 및 가족초청이 가능한 자격으로 변경

❸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외국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지역특화산업 장기근속자, 지역취업 유학생, 지역내 창업자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의 장기체류 요건 우대

❹ **국내 체류 전문자격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업연계 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사전등록제 등) **구축** 검토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체류 외국인이 전문교육 수료 및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업과 연계하는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구축

❺ 영주·귀화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추진, 이주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방안* 검토** 등 외국인 정착여건 개선

* 현재는 공공부조·사회서비스 일부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영주권자 등에 대한 서비스 재설계 검토

3 고령층 고용 활성화

◇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등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층에 대한 고용활성화 기반 마련**

◇ **제1·2기 TF 논의과제**

- **(1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60세 이상, 27만원→30만원),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22년) 등
- **(2기)**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추진,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논의 진행,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등 설계 노력

❶ '21.하반기부터 경사노위 연구회(가칭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 추진**

❷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에 기반한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4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권익보호

◇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로부터 안정적 노동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체계 마련**

◇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❶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4법 추진* 등 **개별 법·제도 개편****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검토, 플랫폼종사자 직업훈련 제공 등

❷ 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 플랫폼 기업 공제회 설립, 종사자 권리구제 센터 등 **플랫폼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

*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시 소요비용 일부 지원

❸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체계에 대한 시행성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검토

[생산인력의 생산성 제고]

1 평생학습 지원강화

◇ 평생학습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수요자 친화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국민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 **제1·2기 TF 논의과제**

- **(1기)**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도입(학습경험인증제 등), 기업 사내대학 설립 허용, 맞춤형 단기 비학위과정 확대 등
- **(2기)** 평생교육·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 대학-기업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 연계방안 마련 등

❶ 전 국민이 평생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강화**

*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추진

** 실업자·근로자 대상 직무훈련 → 전국민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❷ 수요자가 **원스톱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플랫폼간 상호 연계** 추진

*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바우처 연계를 통한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전문대-폴리텍 연계 강화, 핵심 플랫폼(고용부 HRD-Net, 교육부 온국민평생배움터)간 상호 연계

❸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 (예) **편입학**: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 가능 학년 확대
학점: 선행학습·시간제등록 학점 누적 관리 → 추후 정규과정 입학시 학점에 반영
학사 운영: 야간·주말 수업, 블렌디드 러닝, 집중이수제, 마이크로디그리 등
학습장소: 학교밖 학습장 개설·운영 일부 허용

2. 축소사회 대응

◇ **제1·2기 TF 논의과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대응**

- **(학령인구)** 교원수급기준 마련 및 양성체제 개편,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 개발,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 **(병역자원)** 중간계급 간부중심 병력구조 재설계,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 전환복무(의경·해경 등) 및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 적정수준 검토

1 대학 체질개선

◇ **학령인구 감소**로 현실화된 **대학 미충원**에 대응하여, **대학별 다운사이징 유도** 및 **한계대학에 대한 폐교절차**를 **체계화**

◇ 동시에 **지역-대학 협업, 공유·협력** 등을 통한 질적 개선 지원

◇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❶ **대학 기본역량진단, 유지충원율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 혁신 및 **정원 유연화*** 등 **적정 규모화** 유도

* 학부-대학원간 정원조정, 동일법인 대학간 정원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❷ **교육부실 및 재정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 폐교·청산 지원**

* 교직원 임금체불 등 채무우선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폐교통합관리 시스템('22년 구축예정)을 통한 폐교자산 매각 등 지원

❸ 국립대학법 제정, 국립대간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등) 전환 등을 통해 **지역성장 거점으로 국립대 혁신** 추진

* 권역내 2개이상 국립대간 학사구조 개편, 교원교류 및 공동복수학위 등 마련

❹ **지역과 연계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전문대 학과 개편,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및 성인 학습자 온·오프라인 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대학 유형별 체질개선(안) >

자율 혁신대학
- 일반재정지원 대학

→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정원조정 유연화 등 적정규모화
- 지역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 (고등평생직업교육기능 전환 지원, 연구중심 대학 도약 등)

▸ **유지충원율 점검**
→ 미충족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 및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

한계대학
- 재정지원제한 대학
-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중 일부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 ▸ **컨설팅을 통한 구조개혁 이행**

재정 위험대학 → ▸ **위험단계에 따른 3단계 적기 시정조치**
- **1단계: 경영개선권고**(자체이행계획서 수립)
- **2단계: 경영개선요구**(임금체불 등 시정명령, 정원조정 및 유휴교지 활용한 시설전환 등 컨설팅)
- **3단계: 경영개선명령**(임원 직무집행 정지, 청산가치 확인, 구조조정 명령, 명단 공시)

→ **미이행시 폐교명령 및 청산지원**

2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

◇ **산업 현장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①**필요인력 확보** 및 **숙련전수**, ②인력감소 보완 위한 **스마트화** 등 **생산성 제고** 추진

◇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❶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숙련인력 노하우 DB화 및 숙련기술 전수** 등 숙련기술 및 인력 발굴·활용 확대 지원

❷ **고령화 업종 디지털 전환** 지원, **뿌리특화 생산성경영인증 체계*** **개발·보급** 등 숙련기술 분야 생산성 혁신역량 강화 지원

* 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해 인증해주는 제도

3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 비혼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1인 가구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

◇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❶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을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생활 속 차별적 제도 개선**

* 가족 정의를 혼인·혈연·입양 이외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이 양육·부양·교육 등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❷ 비혼동거 등 **생활관계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방향 검토

* 사실상 가족에 대한 정의, 인적·재산적 효력, 관계 증명 등에 관한 사항

❸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사회보장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적 요인 해소****

* 청년특화주택·고령자복지주택 등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 1인가구 사회통계 작성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1인가구 소득지원 강화(1~2인 가구지출실태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 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 지역소멸 선제 대응

◇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초광역권계획 수립, 행정통합** 등을 통해 발전이익 극대화

◇ **소멸위기 지역**은 **지역의 필요·선택에 따른 특화사업** 지원

◇ **제1·2기 TF 논의과제**

- **(1기)** 자치단체간 협약제도 활용 촉진, 민·관협력 방식 지역정책 추진모델 개발, 공공·생활서비스 집약·순환연결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 **(2기)** 빈집 실태조사 착수 추진('22년) 및 정보체계·거래망 구축,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대규모 양식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 등

1 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권 형성

❶ 광역자치단체간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 추진**

* 2개 이상 광역지자체간 합의한 공간구상 및 협력사항 등을 담은 지역주도 광역권 협업 계획

❷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등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행정통합 논의 지원**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검토**

*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 (지방자치법 제2조 신설, '22년부터 시행)

❸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복합된 **도심융합 특구***를 **조성**하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5개 광역시 중 대구·광주·대전은 사업지구 선정완료, 부산·울산은 연내 선정협의 중

2 소멸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

❶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 단위 연계·협력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시책·제도 특례*** **발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중소기업 지방세제 감면, 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 등

❷ 농산어촌 지역 **생활거점 구축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및 노후주택 정비 및 축사·공장 난립해소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 읍면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자리·생활SOC사업 등 연계

❸ **지역의 필요 및 선택**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 및 **농촌협약**** **추진**

* 지자체 주도로 위기극복 계획(50여개 시책사업 중 필요사업 선택)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연계 및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가 발굴 지원

**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지원

4. 지속가능성 제고

1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 **고령자 급증**에 따른 **지출확대·기금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추진

◇ **제1·2기 TF 논의과제**

▸ **(1기)**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❶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정책·위험관리 전문위원회** 내실화

❷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개편**과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추진

* (시범사업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 (건강실천) 건강프로그램 이수, 걸음수 등 (인센티브) 연간 5~6만원(1인) 포인트 지급 등

2 고령층 건강권 보장

◇ **(의료)** 고령층이 **거주지역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 추진

◇ **제1·2기 TF 논의과제**

▸ **(2기)** IoT, AI 활용 통합돌봄 등 비대면 의료사업 확대, 돌봄로봇 보급 추진

❶ **(재택의료 강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ICT 활용 의료취약지 의사-의료인간 협진 활성화**,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 검토

*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전담팀이 고령자, 거동불편 환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돌봄 서비스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제공 → 거주공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❷ **(지역책임병원)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지역책임병원**(가칭) **지정·육성**

* 대도시(서울·광역시)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

❸ **(비대면 의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하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 마련**

* 복지부와 의료계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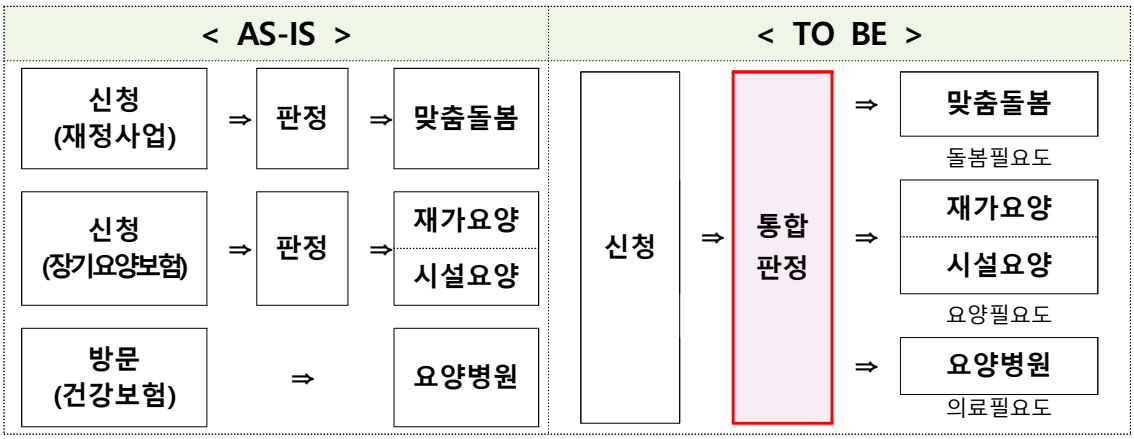
◇ (**돌봄**)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필요도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제공, 양질의 돌봄인력 확충**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 추진**

◇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❶ 고령층에게 **돌봄·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각 서비스 간 연계** 제공

* 돌봄·요양·의료 서비스를 재정기반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하여 필요도와 무관하게 요양·의료서비스의 과다·과소 이용 발생 등 비효율성 발생

** 장기요양 신청 노인 등을 대상으로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추진('21.10월)



❷ **돌봄인력 확충** 및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양성 경로 확대, 요양보호사 중간 관리자 양성, 보수·양성교육 내실화** 등 추진

* 다양한 연령층의 인력 확보 노력, 내국인력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보충적 활용방안도 검토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통계 인프라 개선** 및 **연구 기능 강화**

◇ **제3기 TF 신규 논의과제**

❶ **인구통계 추계모형 개선, 추계주기 단축**(5년→2년), **대상·분야별 통계 세분화** 등 **통계인프라 개선**

❷ 경인사연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을 구성·운영**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 지속 연구

Ⅵ. 향후 발표 및 추진계획

1. 발표 계획

□ 이번 총괄 안건을 포함하여 4대 전략별 과제(총 13개)들을 '21.7월부터 4편의 시리즈로 순차 발표

❶ **(1편: 총괄)** 인구구조 변화 영향 및 대응 방향(2개 과제, 7월)

-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기재부)
-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법무부)

❷ **(2편: 전략1)** 인구절벽 충격완화 대응 방안(4개 과제, 7월)

-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고용부)
-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고용부)
-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여가부)
-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교육부·고용부)

❸ **(3편: 전략2)** 축소사회 대응 방안 및 추진기반 확충(5개 과제, 8월)

-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산업부)
-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교육부)
-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여가부)
- 급격한 인구변동 대비 인구통계 개선방안(통계청)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고용·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경인사연)

❹ **(4편: 전략3+4)** 지역소멸 대응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개 과제, 9월)

- 지역소멸 대응(국토부·행안부)
-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복지부)

□ 각 전략별 총괄 안건·과제는 경제중대본에서 논의 후, 과제 성격에 따라 경제중대본·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

2. 추진 계획

□ 발표 과제들은 하반기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시기 조정 검토

○ 발표 과제는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진행 상황 주기적 점검(분기 1회)

□ 인구정책 관련 포럼 개최(10월말, 경인사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경각심 제고 및 정책과제 추가 발굴

[발표 일정(안)]

안건		발표	일정
❶ 총괄 안건 및 외국인력 부족 대응		경제 중대본	7.7일
▸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기재부		
▸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법무부		
❷ 인구절벽 충격 완화		경제 중대본	7월말
▸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	고용부		
▸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고용부		
▸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	여가부	사회관계 장관회의	7월말
▸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교육부 고용부		
❸ 축소사회 대응 및 추진기반 확충		경제 중대본	8월말
▸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	산업부		
▸ 급격한 인구변동 대비 인구통계 개선방안	통계청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고용·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경인사연		
▸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부	사회관계 장관회의	8월말
▸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여가부		
❹ 지역소멸 선제대응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경제 중대본	9월 중순
▸ 지역소멸 대응	국토부 행안부		
▸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복지부		

참고 3 인구정책 TF 1, 2, 3기 과제

현황	대응전략	분야	1, 2기 주요과제	3기 추진과제
인구 감소	노동공급 감소 ↓ 인구절벽 충격완화	여성	▸ (2기) 육아·가사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창업지원 서비스 확대	▸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검토 ▸ 성평등 현황 공시제 개선, STEM분야 여성진입강화
		고령자	▸ (1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분기당 27→3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1인당 월 30만원) ▸ (2기) (가칭)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도입, 65~69세, 70세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통계 세분화,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연장방안 지속 논의	▸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 ▸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제도 안착 지원
		외국인	▸ (1기)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및 혜택제공, 성실재입국 제한기간(現 3개월) 단축, 비전문인력 장기체류 비자 전환규모 확대 ▸ (2기)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운영, 이공계 학부 유학생 비전문인력 취업 허용	▸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지역특화형 비자 허용 ▸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원격근무자(telecommuter) 비자 신설
		비정형 근로	▸ (2기)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대상 확대	▸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플랫폼 4법 추진 및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학습·훈련	▸ (1기)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도입(학습경험인증제 등), 기업 사내대학 설립 허용, 맞춤형 단기 비학위과정 확대 ▸ (2기) 평생교육-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 대학-기업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기업 맞춤형 협약반 운영	▸ 원스톱 서비스 위한 플랫폼 간 연계 강화 ▸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강화 ▸ 대학 성인학습자 중심 개편 지원(규제 샌드박스 등)
	부문별 축소 ↓ 축소사회 대응	교육	▸ (1기) 교원수급기준 마련 및 양성체제 개편,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 대학 정원 유연화 등 규제 완화 ▸ 한계대학에 대한 체계적 폐교·청산 지원
		국방	▸ (1기) 중간계급 간부중심 병력구조 재설계,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 대체복무 감축	
		가구	▸ (2기)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非 인구TF)	▸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 개념 확대 ▸ 1인 가구 지원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산업 R&D	▸ (1기) 산업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스마트 공장 및 산단 구축, 스마트인력 양성 ▸ (2기) 디지털 혁신 전문가 양성 및 기업 디지털전환 촉진, 디지털 기술 기반 노동력 증강기술 개발·보급	▸ 산업현장 필요인력 확보 및 숙련전수 ▸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지역 소멸	지역불균형 ↓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역	▸ (1기) 자치단체간 협약제도 활용 촉진, 민·관협력 방식 지역정책 추진모델 개발, 공공·생활서비스 집약·순환연결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 (2기) '22년까지 모든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착수 추진, 빈집 정보체계 및 거래망체계 구축,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대규모 자본필요, 양식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 등	▸ 거점도시 집중 육성, 초광역권 계획 수립 ▸ 행정통합 논의지원 등 지방행정체계 검토 ▸ 지역주도형 지역특화 패키지 대책 지원 ▸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단위 협력 활성화
초고령 사회 임박	지속가능성 저해 ↓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돌봄	▸ (2기) IoT·AI 활용 통합돌봄 등 비대면 의료사업 확대,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추진	▸ 협진 활성화, 재택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 ▸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
		고령층 친화환경 조성	▸ (1기)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재능나눔 일자리 참여연령 하향조정(65→60세) ▸ (2기) 중앙보행섬 설치 확대, 노인보호구역 추가지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테스트 현실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금융상품 출시,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연령 5세 내외 상향조정(現 65세), 경로우대제도 개선논의 착수	▸ 일자리+생활 SOC 사업 등을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 노후주택과 축사 등 난립해소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재정 및 연금·보험	▸ (1기) 장기재정전망 조기착수 및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고령 친화산업	▸ (1기)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 신약·의료기기, 로봇 등 융합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 (2기) 고령친화산업 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추진	